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머리말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나온 지 어느덧 4년 반이 지났다. 북한당국 스스로도 ‘1940년대 후반의 토지개혁에 버금가는 대사건’이라고 표현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북한의 60년 역사에 있어서 뚜렷한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조치의 등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던 기억이 새롭기조차 하다. 이 조치 이후 북한당국 스스로도 ‘경제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한국 내에서도 7·1 조치 및 후속조치를 ‘경제개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북한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아직까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부분적으로 개혁의 후퇴를 암시하는 듯한 조치가 등장하기는 했으나 오히려 개혁적 성격의 후속조치까지 등장하는 등 전반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고 있다.

사실 언제부터인가 북한의 변화를 논할 때 쟁점사항이 변하기 시작했다. 종전에는 북한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했으

나 이제는 어떻게 변했느냐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변화 그 자체라기 보다는 변화의 양상, 성격, 함의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7·1 조치 이후의 북한경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실상 실종되었다는 점이다. 7·1 조치가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여기저기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논의의 질은 둘째치고, 논의가 양적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물론 가장 큰 요인은 북한경제 현황에 대한 자료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fact)을 모아서 축적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그럼으로써 다소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북한 경제개혁 연구에 다시 불씨를 지필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북한의 시장화(marketization)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한다.¹⁾ 물론 아직도 북한경제라는 연구대상은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통계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량적 분석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정량적 분석의 결여에 있기도 하다.

논의에 앞서 시장화에 대해 간단히 개념을 정리해 두고자 한다. 시장화는 사회주의 경제개혁에서 핵심적 요소이다. 그런데 시장화란 다양한 차원의, 또한 여러 가지 범주의 개념이다. 우선 시장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스템으로서의 시장이고 또 하나는 장소로서의 시장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일부 중복되면서 각각 상이한 영역을 포괄한다. 따라서 시장화는 한편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의

1) 이 글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의 시장화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술하지 않는다. 북한의 시장화 실태에 대해서는 예컨대 양문수, “조정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경제개혁,” 『북한조사연구』, 제10권 1호(2006)를 참조.

도입 및 확산으로 규정 가능하다. 시장화는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발생 및 확대에 규정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1) 북한의 시장화 수준 평가에 대한 연구

북한의 시장화 수준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는 모두 다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 추정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여러 연구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남성욱·문성민(2000), 박석삼(2002), 이석(2005) 등이다. 이들의 추정작업 대상은 시장경제 부문, 사경제 부문, 비공식 부문 등으로 용어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다.

남성욱·문성민(2000)의 경우,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공한 통계자료, 북한 공식 발표자료, 국내외 기관의 발표 추정치, 새터민 증언(간접) 등의 자료를 사용했다. 이를 토대로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추정 방식을 원용해 시장경제 부문의 크기를 추정했는데 이들은 1998년 북한 명목GNI의 27.1%가 시장경제 부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석삼(2002)의 경우, 새터민 8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주민의 가계소비지출 규모, 유통현금 규모, 민간보유 외화규모 등을 추정했다. 특히 북한 가계의 농민시장(장마당)에서의 소비지출 규모를 이용해 사경제 규모를 추정했는데 그는 사경제 부문의 비중이 3.6%라고 주장했다.

이석(2005)의 경우, 전기소비량, 수송용 석유소비량이라는 거시경제 통계²⁾를 이용해 북한의 비공식 부문의 규모를 추정했다. 그는 절대규

모보다는 추세에 무게중심을 두었는데 전기소비량을 이용할 경우, 비공식 부문의 대GDP 비중은 1996년 46.5%에서 2000년 31.1%로 줄었고, 수송용 석유 소비량을 이용할 경우, 비공식 부문의 대GDP 비중은 1998년 7.0%에서 2000년 4.8%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선행연구는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대한 선구자적 연구 성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의 여지가 있다.

첫째, 시장경제 규모의 절대적 크기이든 시기별 변화(추세)이든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 추정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시장경제의 진전 양상, 시장화의 내부구조 등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달리 보면 글의 논리구조가 지나치게 단순하다.

둘째, 추정 방법 그 자체도 각각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각 변수들 간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간의 매개변수 혹은 연결고리들에 대한 고려가 철저하지 못하다. 추정에 추정을, 또한 가정에 가정을 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자료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셋째, 대상 시기는 7·1 조치 이전으로 되어 있다. 남성욱·문성민(2000)은 1998년, 박석삼(2002)은 1995~2001년, 이석(2005)은 1983~2000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화 수준 평가에 대한 연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화 수준과 관련해서는 방대한 연구성과가

2) 전기소비량은 미국 에너지성 통계, 수송용 석유소비량은 IEA 통계.

존재한다. 체제전환 이전에는 주로 2차경제(second economy 혹은 비공식 부문 경제)의 규모와 내부구조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체제전환 이후에는 체제이행의 진척도, 진전수준이 주된 연구대상이었다.

체제전환기 구소련·동구의 시장화 수준 평가에 대한 연구로는 EBRD의 Transition Report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IMF, World Bank와 함께 구소련·동구의 체제전환 과정을 사실상 주도한 EBRD는 1994년부터 매년 구소련·동구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간보고서(annual report)로서 Transition Report를 발간해 오고 있다. 그리고 Transition Report는 구소련·동구의 시장화 수준 평가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의 시장화 수준 평가에 대한 연구로는 나카가네 카츠지(2001), 加藤弘之(1997), 黃磷(1997), 北京師範大學經濟與資源管理研究所(2003) 등이 있다.

나카가네 카츠지(2001)의 경우, 가격 자유화의 정도를 통해 시장화의 수준 및 진전도를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시장화란, 한 측면에서 보면 지령성계획에 의한 자재 배분의 비율이 낮아지고 시장조절에 의한 자재 배분의 비율이 높아지는 과정이다.³⁾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격 결정에 있어서 정부고정가격의 비중이 작아지고 시장가격의 비중이 커지는 과정이기도 하다.⁴⁾

3) 재화와 서비스, 생산요소의 배분방법은 형식적으로 말하면 지령성계획, 지도성계획, 시장조절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지령성계획이란 일종의 법률적 성격을 가지며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재를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비해 지도성계획이란, 계획의 달성이 기대되기는 하나 지령성계획과는 달리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가격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즉 정부 고정가격, 정부지도가격, 시장가격이 그것이다.

4) 물론 배분제도와 가격제도는 1대 1로 대응하지 않는다. 즉 지령성계획으로 배분된 재화의 가격 = 정부고정가격인 것은 아니다.

加藤弘之(1997)의 경우, 중국경제를 전통부문, 계획부문, 시장부문의 세 부문으로 나누고 다음 두 개 지표의 종합으로 시장화의 정도를 수량화했다. 즉 전통부문에 대한 근대부문의 비율을 시장화의 제1지표로 정의하고, 계획부문에 대한 시장부문의 비율을 시장화의 제2지표로 명명한 뒤 이들 2개의 지표로 시기별 변화를 추적, 1990년대 들어 현저하게 시장화가 진전되었음을 입증했다. 北京師範大學經濟與資源管理研究所(2003)의 경우, 서방세계가 제시한 경제적 자유도의 개념과 측정방식을 원용해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 정도를 계량화했다.

3. 연구 방법

1) 개념 틀

이 글에서는 북한의 시장화 수준을 평가해 보기 위해 EBRD의 Transition Report 개념 틀을 원용하고자 한다. 사실 EBRD 이코노미스트들은 구소련·동구 각국의 체제전환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 틀은 이론적,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하다.⁵⁾ 또한 북한과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비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Transition Report 스스로가 매년 구소련·동구의 각국들에 대해 다각도로 비교,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구소련·동구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가급적 동일한 개념 틀과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

5) 물론 국제금융기구의 시각, 이른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편 북한의 시장화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하는 데 있어 ‘체제전환’의 개념 틀을 사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북한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체제전환에 착수하지 않았다. 더욱이 체제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다만 이 글에서는 체제전환의 법적·제도적 측면보다는 체제전환의 현실적 측면, 특히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에 주목하고자 한다.⁶⁾ 사실 현실의 차원에서는 체제전환 초기에 이른바 개혁기의 현상과 명확한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북한의 현 단계 시장화는 이른바 개혁기의 현상과 체제전환기의 현상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후술).

이 글의 개념 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⁷⁾ 체제전환이란 명령 경제로부터 시장지향적 경제로의 진행을 가리킨다. 이는 제도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체제전환의 핵심 요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체제전환의 핵심 요소로서 6대 개혁(<표 1> 참조)을 생각할 수 있다. 대규모 사유화, 소규모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가격자유화와 경쟁, 무역 및 외환 시스템 개혁, 은행개혁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6개 부문의 개혁속도가 동일하지 않다. 부문별로 개혁의 진척 정도가 상이하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거의 모든 국가들은 <표 1>에 나와 있는 모든 영역에서 개혁을 시작하는데 이 가운데

6) 물론 체제전환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측면과 법·제도적 측면을 다 함께 고찰해야 한다.
7) 이 개념 틀은 EBRD, *Transition Report*(1994), pp.3~15의 서술내용을 필자가 북한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표 1> 체제전환 지표 분류 체계

체제전환 요소	범주	범주에 대한 설명
대규모 사유화	4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지지를 반영하는 사유화 계획에 의해 50% 이상의 국유기업 자산이 민간으로 넘어갔음.
	3	대규모 국유기업 자산의 25% 이상이 사유화되었거나 매각이 진행 중임. 하지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2	고도의 포괄적 프로그램이 실행될 준비가 거의 다 끝났음. 일부는 매각 완료.
	1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소규모 사유화	4	포괄적이고 잘 설계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음.
	3	거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음. 하지만 설계라든지 중앙의 감독 부족 등의 면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음.
	2	상당 부분 사유화가 이루어짐.
	1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기업구조조정	4	기업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작동 중. 기업 차원에서는 강한 금융적 규율. 대규모 기업 집단 해체.
	3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이 만들어짐[예컨대 엄격한 신용 및 보조금 정책 그리고(혹은) 파산법의 강력한 시행을 수반하는 사유화를 통해]. 혹은 기업집단을 해체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이 취해짐.
	2	적당히 엄격한 신용 및 보조금 정책. 파산법의 미약한 시행. 기업집단을 해체하기 위한 행동이 거의 없음.
	1	엄격하지 않은 신용 및 보조금 정책이 기업 차원에서 금융적 규율을 약화시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거의 없음.
가격자유화와 경쟁	4	포괄적인 가격자유화와 가격경쟁. 반독점법 시행 중.
	3	포괄적인 가격자유화와 가격경쟁.
	2	가격통제는 여러 중요한 제품군에 남아 있음.
	1	대부분의 가격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통제됨.
무역 및 외환 시스템	4	수출입 쿼터 거의 없음. 정부 부처나 종전의 국유 무역 독점체에 의한 수출입에 대한 심각하고 직접적인 간섭 없음. 거의 모든 경상계정이 단일환율에 의해 태환 가능. 관세의 불균등성 거의 없음.

	3	수입 쿼터 거의 없음. 거의 모든 경상계정이 단일환율에 의해 태환 가능.
	2	수입 쿼터 거의 없음. 거의 모든 경상계정이 원칙적으로 태환 가능. 하지만 환율제도는 충분히 투명적이지 않음. 아마도 복수의 환율 존재.
	1	광범위한 수입 통제 혹은 외환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합법적 접근.
은행개혁	4	제대로 기능하는 은행 간 경쟁, 빈틈없는 감독.
	3	은행 자본재구성, 은행 감사, 감독체계의 구축 등의 면에서 실질적인 진전 있음. 사적 은행의 엄연한 존재. 완전 금리 자유화. 저렴한 제용자에 대한 특별적 접근 거의 없음.
	2	금리가 신용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1	이원적 은행제도 이상의 진전 없음.

자료: EBRD, *Transition Report*(1994).

진전이 빠른 것은 가격 및 무역 부문의 개혁, 소규모 사유화이다.

반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은행개혁, 기업구조조정 그리고 대규모 사유화이다. 체제전환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규모의 근본적 제도 개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시장이 만들어지고 개혁되고 소규모 기업이 사유화되는 것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체제전환은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사적 부문 활동(private sector activity)의 확대에 있다. 사적 소유 기업은 시장경제의 기본 요소이다.

그런데 여기서 소유권(ownership) 개념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소유권은 매우 다양한 차원의 것으로서 통제, 접근, 판매 등 여러 차원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과 세금을 제한 잉여소득, 즉 순익(net profits)에 대한 권리이다.⁸⁾ 사적 소유권(private ownership)이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소한 시야를 가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적 기업(private firm)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없다.

재산권(property rights)과 거버넌스를 이해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법률적 구조를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이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규율의 강제는 매우 약하고, 투명성은 거의 없고, 경쟁과 파산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기간 자본주의가 발달해 왔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는 사적 부문에 대한 측정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사적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야말로 체제 전환에서 최초의,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지표일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총산출(total output),

-
- 8) 코르나이(J. Kornai)에 따르면 소유권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잔여소득권(right to residual income), 양도권(right to alienation), 통제권(right to control)이 그것이다. 첫째, 잔여소득권은 어떤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가리킨다. 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가운데 비용을 제한 나머지 소득에 대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잔여소득권이라 칭한다. 둘째, 양도권은 예를 들면 화폐수입을 얻기 위해 자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것을 타인에게 선물로 주거나 유산으로서 남길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셋째, 통제권은 자산의 이용, 예컨대 관리, 감독, 의사결정과 관련된 권리이다. 가장 단순한 예는 사적 영역의 소규모 기업에서 소유자가 생산품목, 생산가격, 종업원의 고용과 해고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64~66 참조. 따라서 EBRD Transition Report에서의 소유권 개념은 코르나이가 말한 소유권의 세 가지 범주 가운데 잔여소득권에 가까운 개념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양도나 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잔여소득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EBRD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는 북한의 시장화 수준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혹은 사적 기업 생산물의 총 부가가치이다. 또 다른 것으로는 총고용을 생각할 수 있다.

사적 산출(private output)의 개념을 고찰해 보자. 어떤 기업이 국유, 국영이라면 전통적 견해로는 순산출이 국가생산으로 분류될 것이다. 하지만 국유 공장이 사적 기업에게 임대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모든 순생산은 사적인 것으로 분류될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등을 구입하거나 국유기업에 대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적인 협력업체(sub-contractor)의 활동도 마찬가지로 사적활동으로 분류될 것이다.

그런데 상기의 순산출(net output)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협동조합 혹은 재산권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실체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른바 지하경제(shadow economy)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국유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기업 설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사실 이런 행위는 체제전환 국가들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사실 체제전환국에서는 사적 부문이든 공적 부문이든 국민경제 전체의 산출에 대한 측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대신 고용(employment)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리고 1인당 생산이 체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체 고용에서 사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에서의 사적 부문의 비중을 대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행기 경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국가적 과제만 달성한다면 효과적으로 사적 부문이 될 수 있는 직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지표도 정확성의 면에서 한계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글에서는 체제전환의 핵심 요소인 6대 개혁 가운데 소규모

사유화, 가격자유화, 기업구조조정 등 3대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기로 한다. 북한의 경우, 대규모 사유화와 은행 개혁은 진전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무역 및 외환 시스템은 상당히 진전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새터민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2) 설문조사

이 글에서는 북한의 실태 파악을 위해 새터민에 대해 필자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설문조사는 새터민 개인의 경험 및 주변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가지의 설문조사 결과를 주로 활용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보조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편의상 세 가지 설문조사를 A, B, C로 부르기로 한다.⁹⁾

설문조사 A는 북한의 시장화 수준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2005년 12월에 실시한 것이다. 이는 2002년 7월 이후에, 즉 7·1 조치 실시 이후 북한을 이탈한 주민 121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 B, C는 다른 주제의 연구를 목적으로 각각 2005년 7~10월, 2004년 6~8월에 실시한 것이다. 설문조사 B는 7·1 조치 이후 북한을 이탈한 주민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C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북한을 이탈한 주민 16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설문조사 A를 주로 활용하고 B, C는 보조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설문조사는 A를 가리킨다.

한편 설문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9) 설문조사 A, B, C에 응했던 새터민(모집단)이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표 2> 설문 대상 새터민 인적 사항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출신지역 (최종 거주 지역)	함경북도	89	73.6
	비함경북도	32	26.4
	합계	121	100.0
출신지역 (최종 거주 지역)	국경지역	72	60.5
	비국경지역	47	39.5
	합계	119	100.0
연령	20대	46	38.7
	30대	57	47.9
	40대	16	13.4
	합계	119	100.0
소득 수준	저소득(월 2,000원 이하)	25	33.8
	중소득(월 2,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21	28.4
	고소득(월 20,000원 이상)	28	37.8
	합계	74	100.0
최종 거주 지역 거주기간	5년 이하 거주	38	31.9
	6년 이상 거주	81	68.1
	합계	119	100.0
성별	남	43	35.5
	여	78	64.5
	합계	121	100.0
학력	고등중 졸업	99	84.6
	전문학교 졸업	7	6.0
	대학 졸업	10	8.5
	기타	1	0.9
	합계	121	100.0
군 복무 여부	군 복무	22	18.3
	군 미복무	98	81.7
	합계	120	100.0
당원 여부	당원	13	11.0
	비당원	105	89.0
	합계	118	100.0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징의 하나는 출신지역(최종 거주 지역)이 다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함경북도가 전체의 73.6%이고 비(非)함경북도가 26.4%에 불과하다. 또 국경지역¹⁰⁾이 전체의 60.5%, 비국경지역이

39.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전반적으로 사회의 기층 민중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복무자가 전체의 18.3%, 당원이 11.0%에 불과하다. 학력도 고졸자가 전체의 84.6%에 달한다. 연령으로는 30대가, 성별로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설문 대상자가 대표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조사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4. 북한의 시장화 수준 평가

이제부터는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기로 한다. 대상 시기는 모두 7·1 조치 이후로 설정한다. 요컨대 이 글에서는 대체로 2003~2004년 시점의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1) 가격자유화

(1) 공업부문의 가격자유화 수준

우선 시장가격 판매 제품의 비중을 조사했다. 즉 공장·기업소가 생산한 제품 가운데 국가계획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다른 공장·기업소나 개인, 장마당(종합시장)에 판매하는 제품의 비중, 다시 말해 국

10) 국경지역은 문자 그대로 국경에 있는 지역이다. 여기서는 시·군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한편 함북 은덕군의 경우, 국경지역이 아니지만 타 지역에서 은덕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경지역인 무산시를 경유해야 하므로 국경지역에 포함시켰다(새터민 7씨의 조언).

<표 3> 공업부문의 가격자유화 수준 (1)

설문 문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합계
공장 생산 생산재 중 시장가격 판매 비중	응답자 수(명)	3	6	2	3	5	6	3	1	4	10	3	46
	비율 (%)	6.5	13.0	4.3	6.5	10.9	13.0	6.5	2.2	8.7	21.7	6.5	100
공장 생산 소비재 중 시장가격 판매 비중	응답자 수(명)	3	9	2	2	2	6	6	5	1	9	5	50
	비율 (%)	6.0	18.0	4.0	4.0	4.0	12.0	12.0	10.0	2.0	18.0	10.0	100
공장 전체의 원자재조달 결재 중 현금결재의 비중	응답자 수(명)	4	3	1	6	1	1	0	3	2	8	2	31
	비율 (%)	12.9	9.7	3.2	19.4	3.2	3.2	0	9.7	6.5	25.8	6.5	100

정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자율가격)에 의해 판매하는 제품의 비중을 대상으로 했다. 이를 생산재와 소비재로 나누어 조사¹¹⁾했는데 조사결과는 <표 3>과 <표 4>에 요약, 정리되어 있다.

생산재의 경우, 시장가격 판매 제품의 비중이 90%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10명, 21.7%) 그 다음이 10%와 50%라는 응답이었다(각각 6명, 13.0%). 평균으로 보면 시장가격 판매 제품이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 소비재의 경우, 시장가격 판매 제품의 비중이 10% 및 90%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각각 9명, 18.0%), 그 다음이 50% 및 60%라는 응답이었다(각각 6명, 12.0%). 평균으로 보면 시장가격 판매 제품이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자. 이제는 제품의 판매가 아니라 원자재 구매의 관점에서

11) 7·1 조치 이후에도 공장·기업소에서 직접 근무했거나 당정기관에서 공장·기업소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만 답하도록 요청했다.

<표 4> 공업부문의 가격자유화 수준 (2)

설문 문항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장 생산 생산재 중 시장가격 판매 비중	46	53.5	32.6	0	100
공장 생산 소비재 중 시장가격 판매 비중	50	53.3	33.5	0	100
7.1 조치 이후 공장의 원자재 조달 경로로서 국가계획에 의한 수입산 공급의 비중	19	54.6	29.1	18	100
7.1 조치 이후 공장의 원자재 조달 경로로서 국가계획에 의한 북한산 공급의 비중	15	42.1	33.8	1	100
7.1 조치 이후 공장의 원자재 조달 경로로서 공장 자체적인 수입산 구입의 비중	16	53.1	35.5	5	100
7.1 조치 이후 공장의 원자재 조달 경로로서 공장 자체적인 북한산 구입의 비중	16	39.1	39.9	5	100
공장 전체의 원자재조달 결재 중 현금결제 비중	31	51.9	36.0	0	100

고찰한다.

공장·기업소가 원자재를 조달하는 경로는 크게 보아 네 가지이다. 첫째, 국가계획에 의해 수입 원자재를 공급받는다. 둘째, 국가계획에 의해 북한산 원자재를 공급받는다. 셋째, 공장·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수입 원자재를 구입한다. 넷째, 공장·기업소가 자체적으로 북한산 원자재를 구입한다. 그런데 여기서 앞의 두 가지가 계획에 의한 조달, 뒤의 두 가지가 시장을 통한 조달에 속한다.

설문조사 결과, 계획에 의한 조달과 시장에 의한 조달이 거의 비슷하거나 전자가 약간 많게 나타났다. 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국가계획에 의한 수입산 공급의 비중이 54.6%, 국가계획에 의한 북한산 공급의 비중이 42.1%였다. 시장에 의한 수입산 구매의 비중은 53.1%, 시장에 의한 북한산 구매의 비중이 39.1%였다. 한편 계획에 의하든, 시장에 의하든 공장·기업소가 원자재를 조달할 때 북한산보다는 수입산의 비

중이 다소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장·기업소의 현금결제 비중을 통해서도 추론 가능하다. 국가계획에 의한 공장·기업소 간 원자재 공급은 기본적으로 행표 등 무현금결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결제는 공장·기업소 간 시장적 거래(7·1 조치 이전에는 비공식적 거래)를 나타내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공장·기업소의 현금결제 비중은 평균 51.9%로 나타났다. 분포로 따지면 90%(8명, 25.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6명, 19.4%)였다. 한편 설문조사 B에서는 현금결제 비중이 '60% 이상'이 32명(3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 이하'(16명, 19.5%), '50% 정도'(13명, 15.9%), '30% 정도'(11명, 13.4%)였다.¹²⁾ 설문조사 A와 B를 함께 고려하면 공장·기업소의 원자재 조달에 있어서 현금결제, 따라서 시장적 거래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생산재 및 소비재의 시장가격 판매 비중의 평균치(각각 53.5%, 53.3%)는 전혀 근거 없는 수치가 아니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 농업부문의 가격자유화 수준

우선 시장가격 판매 제품의 비중을 고찰해 보자. 즉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가운데 국가계획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다른 공장·기업소나 개인, 장마당(종합시장)에 판매하는 제품의 비중, 다시 말해 국정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자유가격)에 의해 판매하는 제품의 비중이다. 이를 식량과 비식량으로 나누어 조사했는데¹³⁾ 조사결과는 <표 5>와

12) 설문조사 B에서는 현금결제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자가 총 82명이었다.

13) 7·1 조치 이후에도 농장에서 직접 근무했거나 당정기관에서 농장을 감독하

<표 5> 농업부문의 가격자유화 수준 (1)

설문 문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합계
농장 생산 식량 중 시장가격 판매 비중	응답 자수 (명)	3	2	3	3	2	2	2	4	4	2	6	33
	비율 (%)	9.1	6.1	9.1	9.1	6.1	6.1	6.1	12.1	12.1	6.1	18.2	100
농장 생산 비식량농산물 중 시장가격 판매 비중	응답 자수 (명)	1	0	1	3	6	3	1	5	7	5	6	38
	비율 (%)	2.6	0	2.6	7.9	15.8	7.9	2.6	13.2	18.4	13.2	15.8	100

<표 6> 농업부문의 가격자유화 수준 (2)

설문 문항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농장 생산 식량 중 시장가격 판매 비중	33	56.1	34.1	0	100
농장 생산 비식량 농산물 중 시장가격 판매 비중	38	66.3	26.8	0	100
7·1 조치 이후 농장의 원자재 조달 경로로서 국가계획에 의한 수입산 공급의 비중	11	42.4	28.0	10	100
7·1 조치 이후 농장의 원자재 조달 경로로서 국가계획에 의한 북한산 공급의 비중	7	30.0	21.6	10	70
7·1 조치 이후 농장의 원자재 조달 경로로서 농장 자체적인 수입산 구입의 비중	8	47.5	24.3	20	80
7·1 조치 이후 농장의 원자재 조달 경로로서 농장 자체적인 북한산 구입의 비중	7	50.0	25.8	10	80

<표 6>에 요약, 정리되어 있다.

식량의 경우, 시장가격 판매 농산물의 비중이 100%¹⁴⁾라고 응답한

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만 답하도록 요청했다.

14) 시장가격 판매 식량이 100%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는 사실은 일견 놀라운 대목이다. 아마 응답자들의 착각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식량은 국가에 우

사람이 가장 많았고(6명, 18.2%) 그 다음이 70%와 80%라는 응답이었다(각각 4명, 12.1%). 평균으로 보면 시장가격 판매 제품이 전체의 56.1%를 차지했다. 비식량의 경우, 시장가격 판매 농산물의 비중이 80%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7명, 18.4%) 그 다음이 40%와 100%라는 응답이었다(각각 6명, 15.8%). 평균으로 보면 시장가격 판매 제품이 전체의 66.3%를 차지했다.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자.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판매가 아니라 원자재 구매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농장이 원자재를 조달하는 경로는 크게 보아 네 가지이다(공장과 동일). 첫째, 국가계획에 의해 수입 원자재를 공급받는다. 둘째, 국가계획에 의해 북한산 원자재를 공급받는다. 셋째, 농장이 자체적으로 수입 원자재를 구입한다. 넷째, 자체적으로 북한산 원자재를 구입한다. 그런데 앞의 두 가지가 계획에 의한 조달, 뒤의 두 가지가 시장을 통한 조달에 속한다.

농산물의 경우, 공산품과는 달리 수입산이든 북한산이든, 시장에 의한 조달이 계획에 의한 조달보다 다소 많다고 볼 수 있다. 평균으로 보았을 때 국가계획에 의한 수입산 공급의 비중이 42.4%, 국가계획에 의한 북한산 공급의 비중이 30.0%에 불과했다. 반면 시장에 의한 수입산 구매의 비중이 47.5%, 시장에 의한 북한산 구매의 비중이 50.0%에 달했다. 또한 수입산 원자재를 조달할 경우에는 시장에 의한 것과

선적으로 수매되고, 농장원 사이에 분배하고 그 나머지(혹은 분배 전에)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당수 농장에서 국가 수매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농장의 토지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군대에 넘겨주고 나머지는 농장이 사실상 자율적으로 처분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응답자들의 착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가격 판매 비중에 대한 설문결과는 분명 과대평가된 것이다.

계획에 의한 것의 비중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5.1% 포인트), 북한산 원자재 조달 시에는 시장에 의한 것과 계획에 의한 것의 비중 차이가 상당 정도(20.0% 포인트)에 달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결국 식량 및 비식량 농산물의 시장가격 판매 비중의 평균치(각각 56.1%, 66.3%)는 전혀 근거 없는 수치는 아니다. 다만 설문 대상자들의 착각 등으로 약간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2) 소규모 사유화

(1) 공장·기업소, 식당, 서비스업체의 소규모 사유화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유화에 있어서 소유권의 개념을 ‘순익에 대한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 북한에서는 공장·기업소, 식당, 서비스업체¹⁵⁾ 등을 개인에게 명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묵시적으로 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비밀비재하다. 이러한 경우는 소규모 사유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북한에서 공장·기업소, 식당, 서비스업체의 소규모 사유화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는 <표 7>과 <표 8>에 정리되어 있다.¹⁶⁾

지방산업공장, 중앙공업 공장·기업소는 사유화 수준이 낮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산업공장의 경우,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비중에 대해서는 0% 및 10%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각각 15

15) 서비스업체는 북한 용어로 편의봉사업, 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각종 수리소, 가라오케, 당구장 등을 가리킨다.

16) 이하에서 서술할 소규모 사유화, 사직 부문의 고용,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새터민 본인이 북한에서 최종적으로 거주했던 시, 군의 상황에 대해 응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설문 대상 새터민 가운데 최종 거주 지역에 6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의 비중은 68.1%에 달하고 있다.

<표 7> 소규모 사유화 수준 (1)

설문 문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합 계
지방산업공장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응답 자수 (명)	15	15	6	2	0	0	1	1	0	0	0	40
	비율 (%)	37.5	37.5	15.0	5.0	0	0	2.5	2.5	0	0	0	100
중앙공업 공장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응답 자수 (명)	20	9	6	1	1	0	0	1	1	0	0	39
	비율 (%)	51.3	23.1	15.4	2.6	2.6	0	0	2.6	2.6	0	0	100
(국영) 상점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응답 자수 (명)	7	19	4	5	10	5	1	5	7	5	5	73
	비율 (%)	9.6	26.0	5.5	6.8	13.7	6.8	1.4	6.8	9.6	6.8	6.8	100
식당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응답 자수 (명)	8	7	6	3	9	9	3	5	10	7	13	80
	비율 (%)	10.0	8.8	7.5	3.8	11.3	11.3	3.8	6.3	12.5	8.8	16.3	100
서비스업체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응답 자수 (명)	11	8	10	6	6	11	1	8	6	4	4	75
	비율 (%)	14.7	10.7	13.3	8.0	8.0	14.7	1.3	10.7	8.0	5.3	5.3	100
무역회사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응답 자수 (명)	15	7	5	7	4	3	4	2	1	4	3	55
	비율 (%)	27.3	12.7	9.1	12.7	7.3	5.5	7.3	3.6	1.8	7.3	5.5	100

명, 37.5%). 평균으로 보더라도 11.5%에 불과했다. 중앙공업 공장·기업소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비중에 대해서는 0%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20명, 51.3%). 그 다음이

<표 8> 소규모 사유화 수준 (2)

설문 문항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방산업공장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40	11.5	15.1	0	70
중앙공업 공장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39	11.0	18.0	0	80
(국영) 상점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73	40.1	32.8	0	100
식당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80	54.4	34.2	0	100
서비스업체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75	41.5	31.2	0	100
무역회사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55	32.9	32.3	0	100

10%, 20%의 순이었고, 평균치도 11.0%에 불과했다. 다만 사유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장·기업소와는 달리 식당, 상점, 서비스업체, 무역회사는 사유화가 일정 정도 진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⁷⁾ 사유화가 가장 진전된 분야는 식당이었다. 식당의 개인 운영 비중에 대해서는 1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13명, 16.3%), 그 다음이 80%였다(10명, 12.5%). 평균치는 54.4%로 나타났다. 상점, 서비스업체도 상당 정도 사유화가 진전되었다. 상점 중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의 비중에 대해서는 1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19명, 26.0%), 그 다음이 40%(10명, 13.7%)였다. 평균치는 40.1%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체 중 개인 운영 업체의 비중에 대해서는 0%와 5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각각 11명, 14.7%), 그 다음이 10%와 70%(각각 8명, 10.7%)였으며, 평균치는 41.5%였다.

외화별이사업소 등 무역회사의 사유화 진전도 눈에 띈다. 무역회사

17) 체제전환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체제전환 초기에 사유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부문은 계획경제 시대에 가장 낙후되어 있던 서비스 부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는 전혀 사유화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기는 하다(15명, 27.3%). 하지만 평균치로 보면 32.9%에 달하고 있다.

평균치만 놓고 보면 식당, 상점, 서비스업체, 무역회사의 경우 사유화 수준이 3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식당은 50%를, 상점과 서비스업체는 4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2) 사적 부문의 고용 수준

북한에서 소규모 사유화의 진전 정도는 사적 부문의 고용 수준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¹⁸⁾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이 이른바 8·3 노동자¹⁹⁾의 비중이다. 공장·기업소 내 8·3 노동자의 비중은 30%가 가장 많았고(16명, 18.4%), 그 다음이 50%와 60%(각각 12명, 13.8%), 그 다음이 20%와 40%였다(각각 11명, 12.6%). 평균치로는 42.8%에 달했다.²⁰⁾

주민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때 주부의 시장경제활동 참여가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주부 가운데 시장경제활동 종사자

18) 새터민 설문조사 결과도 사적 고용에 대한 응답이 여타의 항목에 비해 표준 편차도 적고, 정규 분포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달리 보면 새터민의 입장에서 가장 용이하고, 또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분야가 주변 사람들의 고용상태 등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19) 8·3 노동자는 공장에 일정 정도의 현금만 바치면 출근의 의무를 면제받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예컨대 자신의 공식임금의 2~3배 수준의 현금만 공장에 납부하면 일 년 동안 공장에 얼굴 한 번 비치지 않아도 365일 내내 출근부에 도장이 찍힌 것으로 처리된다.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에서 유래했다.

20) 설문조사 C에서 2000년대 초에 북한을 이탈한 새터민 51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 전체 노동자 중에서 8·3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물어보았더니 40% 정도라는 응답이 21명(41.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10% 정도라는 응답(11명, 21.6%), 5% 정도라는 응답(9명, 17.6%), 30% 정도라는 응답(5명, 9.8%), 20% 정도라는 응답(5명, 9.8%)이었다. 평균으로 따지면 공장 전체 노동자 중에서 8·3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4.4% 정도였다. 그런데 7·1 조치 이후 8·3 노동자는 더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표 9> 사적 부문 고용 수준 (1)

설문 문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합계
공장·기업소 내 8·3 노동자 비중	응답자 수(명)	5	4	11	16	11	12	12	8	6	2	0	87
	비율 (%)	5.7	4.6	12.6	18.4	12.6	13.8	13.8	9.2	6.9	2.3	0	100
공장·기업소 내 파트타임식 시 장경제활동 중 사자 비중	응답자 수(명)	5	14	5	7	6	10	6	5	6	5	4	73
	비율 (%)	6.8	19.2	6.8	9.6	8.2	13.7	8.2	6.8	8.2	6.8	5.5	100
주부 가운데 시 장경제활동 중 사자 비중	응답자 수(명)	2	1	1	1	2	8	12	11	26	25	8	97
	비율 (%)	2.1	1.0	1.0	1.0	2.1	8.2	12.4	11.3	26.8	25.8	8.2	100
농상원 중 시장 경제활동종사 자 비중	응답자 수(명)	6	6	5	18	10	11	4	6	8	3	2	79
	비율 (%)	7.6	7.6	6.3	22.8	12.7	13.9	5.1	7.6	10.1	3.8	2.5	100
공장·기업소 노 동자 중 시장경 제활동종사자 비중	응답자 수(명)	4	4	6	11	3	11	12	12	13	7	6	89
	비율 (%)	4.5	4.5	6.7	12.4	3.4	12.4	13.5	13.5	14.6	7.9	6.7	100
당정기관 일꾼 중 시장경제활 동종사자 비중	응답자 수(명)	8	10	10	16	4	2	1	4	4	2	0	61
	비율 (%)	13.1	16.4	16.4	26.2	6.6	3.3	1.6	6.6	6.6	3.3	0	100
전문·관리직 중 시장경제활동 종사자 비중	응답자 수(명)	6	6	10	13	4	7	3	4	4	2	2	61
	비율 (%)	9.8	9.8	16.4	21.3	6.6	11.5	4.9	6.6	6.6	3.3	3.3	100
군인 중 시장경 제활동종사자 비중	응답자 수(명)	8	12	12	7	5	4	4	1	1	2	0	56
	비율 (%)	14.3	21.4	21.4	12.5	8.9	7.1	7.1	1.8	1.8	3.6	0	100
모든 성인 중 시 장경제활동 중 사자 비중	응답자 수(명)	1	2	2	2	3	6	13	18	25	18	5	95
	비율 (%)	1.1	2.1	2.1	2.1	3.2	6.3	13.7	18.9	26.3	18.9	5.3	100
모든 성인 중 시 장경제활동 전 혀 하지 않는 사 람의 비중	응답자 수(명)	6	36	20	15	3	3	0	5	1	1	1	91
	비율 (%)	6.6	39.6	22.0	16.5	3.3	3.3	0	5.5	1.1	1.1	1.1	100

<표 10> 사적 부문 고용 수준 (2)

설문 문항	응답 자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장·기업소 내 8·3 노동자 비중	87	42.8	22.8	0	90
공장·기업소 내 파트타임식 시장경제활동 종 사자 비중	73	44.2	30.4	0	100
주부 가운데 시장경제활동 종사자 비중	97	73.8	20.9	0	100
농장원 중 시장경제활동 종사자 비중	79	43.3	26.2	0	100
공장·기업소 노동자 중 시장경제활동 종사자 비중	89	56.1	27.6	0	100
당정기관 일꾼 중 시장경제활동 종사자 비중	61	30.8	25.1	0	90
전문직/관리직 중 시장경제활동 종사자 비중	61	38.0	27.1	0	100
군인 중 시장경제활동 종사자 비중	56	27.5	23.3	0	90
모든 성인남녀 중 시장경제활동 종사자 비중	95	70.5	20.9	0	100
모든 성인남녀 중 시장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	91	23.1	20.5	0	100

의 비중에 대해서는 80%, 90%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각각 26명, 26.8%와 25명, 25.8%). 평균치는 무려 73.8%를 기록했다. 전체 주부 인구의 3/4이 시장경제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와 농장원의 시장경제활동 참여도 활발하다. 모두 40%를 상회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시장경제활동 참여가 더 활발하다. 평균치로 보아 노동자는 56.1%, 농장원은 43.3%이다. 당정기관 일꾼, 관리직·전문직, 군인의 경우 시장경제활동 참여자의 비중이 낮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다. 모두 25%를 상회하고 있다. 관리직·전문직, 당정기관 일꾼, 군인의 순으로 시장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았다.

모든 성인남녀 가운데 시장경제 활동 종사자의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²¹⁾ 8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25명, 26.3%), 그 다음이 70%

및 90%였다(각각 18명, 18.9%). 평균치는 70.5%를 기록했다. 성인남녀 10명 가운데 7명이 시장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뒤집어보더라도 유사한 응답결과가 나왔다. 모든 성인남녀 가운데 시장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은 평균 23.1%로 나타났다.

3) 기업구조조정

7·1 조치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가 철저한 기업 독립채산제의 실시이다. 국가보조금의 축소, 은행 대출의 엄격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기업구조조정 확대로 이어졌다. 물론 7·1 조치 이전에도 기업구조조정은 사후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나 7·1 조치 이후 대폭 확대되었다.

<표 11> 기업구조조정 수준 (1)

설문 문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합계
지방산업공장 통폐합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가동 중단한 비중	응답 자수 (명)	4	6	3	6	6	3	2	20	8	11	2	71
	비율 (%)	5.6	8.5	4.2	8.5	8.5	4.2	2.8	28.2	11.3	15.5	2.8	100
중앙공업 공장·기업소 중 통폐합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가동 중단한 비중	응답 자수 (명)	7	7	2	2	3	2	6	6	5	9	3	52
	비율 (%)	13.5	13.5	3.8	3.8	5.8	3.8	11.5	11.5	9.6	17.3	5.8	100

21) 설문조사 B는 7·1 조치 이후 이른바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늘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80% 이상 늘었다’는 응답이 67명(4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70% 정도’(40명, 26.8%)였다.

<표 12> 기업구조조정 수준 (2)

설문 문항	응답 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방산업공장 중 통폐합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가동 중단한 비중	71	56.9	29.3	0	100
중앙공업 공장·기업소 중 통폐합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가동 중단한 비중	52	51.7	34.3	0	100

<표 13> 7·1 조치 이후의 기업구조조정 (1)

설문 문항		(1) 매우 그렇다	(2) 조금 그렇다	(3) 중간 정도이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7·1 조치 이후 공장·기업소가 통폐합되거나 문 닫는 경우가 많아졌다.	응답 지수 (명)	38	23	10	
	비율 (%)	45.2	27.4	11.9	15.5	0	100
7·1 조치 이후 공 장·기업소에 대 한 국가보조금 이 축소되었다.	응답 지수 (명)	31	25	9	3	5	73
	비율 (%)	42.5	34.2	12.3	4.1	6.8	100
7·1 조치 이후 공장·기업소에 대한 은행대출 이 종전보다 어 려워졌다.	응답 지수 (명)	51	13	12	3	1	80
	비율 (%)	63.8	16.3	15.0	3.8	1.3	100

<표 14> 7·1 조치 이후의 기업구조조정 (2)

설문 문항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7·1 조치 이후 공장·기업소가 통폐합되거나 문 닫는 경우가 많아졌다	84	1.976	1.097	1	4
7·1 조치 이후 공장·기업소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축소되었다	73	1.986	1.161	1	5
7·1 조치 이후 공장·기업소에 대한 은행대출이 종전보다 어려워졌다	80	1.625	0.960	1	5

지방산업공장 가운데 공장 통폐합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아예 가동을 중단한 공장은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다. 7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20명, 28.2%), 그 다음이 90%, 80%의 순이었는데 평균치는 56.9%를 나타냈다.

중앙공업의 공장·기업소는 지방산업공장보다 덜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다. 공장 통폐합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아예 가동을 중단한 공장은 전체의 절반(51.7%)에 달하고 있다.

또한 7·1 조치 이후 공장·기업소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축소되었으며 은행대출도 어려워졌다. 특히 은행대출이 종전보다 상당히 어려워졌다.

4) 북한과 구소련·동구와의 비교

북한의 시장화 수준, 달리 보면 체제이행의 진전도를 구소련·동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작업이다. 무엇보다도 구소련·동구와는 달리 북한은 본격적인 제도개혁, 특히 이른바 시장지향적 개혁(market-oriented reform)에 착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체제전환기 구소련·동구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기업구조조정도 그러하기니와, 소유권의 변화도 그러하다.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 글에서 북한과 구소련·동구의 비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에서 시도한다. 하나는 체제전환 지표 분류체계 <표 1>에 따라 북한의 체제전환 진전도를 계량적으로 평가,²²⁾ 타국과 비교(<표 15> 참조)하

22) EBRD에서도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체제전환 초중기에는 구소련·동구 각국의 체제전환 진전도 평가를 위한 등

<표 15> 구소련·동구에서 체제이행의 진전도(1990/91/92/93년)

구분	소규모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가격자유화
불가리아	1/1/1/1.67	1/1/1/1	-/2/2/2
체코	1/3/4/4	1/2/2/3	-/2/2/2
에스토니아	1/1/2/3	1/1/2/3	-/-/1/2
헝가리	1/1/2/3	1/2/3/3	1/2/2/2
라트비아	1/1/2/3	1/1/2/2	-/-/2/2
폴란드	3/3/4/4	2/2/2/3	-/2/2/2
루마니아	1/1/2/2	1/1/1/2	0/1/1/2
아르메니아	1/1/2/2	1/1/1/1	-/-/-/2
러시아	1/1/2/3	1/1/1/1	-/0/2/2

자료: EBRD, *Transition Report*(1994).

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사적 고용의 규모를 추정, 타국과 비교 (<표 16> 참조)하는 것이다.

우선 지표로 본 북한의 체제전환 진전도를 보자. 소규모 사유화, 가격자유화, 기업구조조정 등 세 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시도해 보자. 다소 소극적으로 평가한다면 세 항목 다 등급(범주) 1에 해당된다. 중도적으로 평가한다면 세 항목 다 등급(범주) 1.5에 해당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면 세 항목 다 등급(범주) 2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현 단계 시장화는 아주 거칠게 말해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아르메니아 등 일부 CIS 국가의 1992, 93년 수준과 유사하다. 그리고 러시아의 1991, 92년 수준, 헝가리의 1990, 91년 수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급부여(<표 1>)를 최종적으로는 EBRD 이코노미스트들이 수행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항목별로 약간의 편차가 발생한다. 소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진전도가 비슷하지만 기업구조조정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이러한 추세는 체제전환의 일반적인 패턴과도 약간 상이한 것이다.

물론 상기의 결과는 소규모 사유화, 가격자유화, 기업구조조정 등 세 개 항목에 국한시켜 평가한 것이다. 대규모 사유화, 무역 및 외환 시스템, 은행 개혁 등 여타의 세 개 항목까지 포함한다면 북한의 체제 이행 진전도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의 사적 고용 규모를 살펴보자. “북한의 전체 성인남녀 중 시장경제활동 참여자가 전체의 70% 정도”라는 설문조사 결과의 수용을 전제로 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이 경우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풀타임 종사자와 파트타임 종사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풀타임 종사자는 이른바 8·3 노동자 및 주부 등이 주된 범주이고 파트타임 종사자는 공장·기업소 노동자, 농장원, 당정기관 일꾼, 전문직·관리직, 군인 등이 속할 것이다. 하지만 파트타임 종사자의 범주에 속한다 해도 실제로는 시장경제활동에 전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파트타임 종사자도 시장경제활동 투입시간이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추정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보다 정확한 수치 도출을 위해서는 북한의 직업별 인구 통계가 필요한데 이는 입수하기 어렵다. 아주 거칠게 보아 북한의 사적 고용 인구는 30~50%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극적 평가와 적극적 평가를 병행한 결과이다.

이를 구소련·동구와 비교해 보자. 북한에 대한 소극적인 평가의 경우, 즉 사적 고용 인구가 전체의 30% 정도라고 한다면 이는 불가리아, 아르메니아의 1993년 수준과 유사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즉 사적 고용 인구가 전체의 50% 정도라고 한다면 이는 체크,

<표 16> 구소련·동구에서 사경제 부문의 규모(1993~94년)

구분	개혁 조치의 시행	사적 부문의 크기
불가리아	1987년에 사적 부문 활동 허용 범위 확대. 1991년에 가격통제 철폐, 보조금 철폐, 이자율 자유화 등 포괄적 프로그램 실시	GDP의 30~50%가 사적 부문에서 창출. 주로 소매/무역/서비스 부문. 약 30%의 노동력이 사적 부문에 고용(1993/94년)
체코	1990년에 시장지향적 개혁 시작, 1991년 1월에 포괄적 프로그램 채택	GDP의 60% 정도가 사적 부문에서 창출. 협동조합과 협회를 제외하면 사적 부문의 고용은 전체의 47% 차지(1993년 말)
에스토니아	구소련 시절 1989년 1월에 개혁 프로그램 실시, 1991년 8월 독립 후 시장개혁은 가속화	GDP의 50% 이상이 사적 부문의 것이고 고용도 유사한 상황(1993년 말)
헝가리	1988년에 보다 포괄적인 시장개혁에 착수	사적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일 것으로 추정. 사적 고용(협동조합 제외)은 총 고용의 42%(1993년 말)
라트비아	1991년에 독립 후 가격자유화 가속화, 1992년 중반에 거시안정화에 초점을 둔 포괄적 프로그램 실시	사적 부문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1994년), 사적 고용은 50%(1993년)
폴란드	1989년에 보다 포괄적인 시장지향적 개혁에 착수	사적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 사적 고용은 46%(1993년)
루마니아	1990년 11월 급진적인 가격자유화에 착수, 1991~92년에 소규모 사유화, 수입자유화, 보조금 축소 등 점진적이고 심화된 개혁 실시	사적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정부 추정), 사적 고용은 42%(1993년)
아르메니아	1992년 1월에 포괄적 개혁 프로그램 채택	사적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사적 고용은 35%(1993/94년)
러시아	1992년 1월에 포괄적 개혁 프로그램 채택	사적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 사적 고용도 비슷한 수준(1993/94년)

자료: EBRD, *Transition Report*(1994).

폴란드, 러시아 등 상당수 체제전환 국가의 1993년 수준과 유사하다. 중간적 평가, 즉 40%라면 헝가리, 루마니아의 1993년 수준에 해당된다.

한편 지표(등급)에 의한 체제전환 진전도 평가와, 사적 고용 규모에 의한 평가는 완전히 정합적인 것은 아니다. 구소련·동구를 다룬 <표 15>, <표 16>이 그러하고 앞에서 북한을 구소련·동구와 비교했을 때도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맺음말에 대신하여

이 글에서의 분석 결과는 매우 잠정적인 것이다. 데이터를 새터민 설문조사 결과에 의존한다는 방법의 면에서도, 설문대상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한계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 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 글은 법·제도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현실적 측면에서 북한의 시장화에 접근한다. 이 경우, 소규모 사유화, 가격자유화, 기업구조조정 등 세 개의 체제전환 지표를 통해 보면 2003~2004년 현재 북한의 시장화는 아주 거칠게 말해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아르메니아 등 일부 CIS 국가의 1992, 93년 수준과 유사하다. 그리고 러시아의 1991, 92년 수준, 헝가리의 1990, 91년 수준과 유사하다.

또한 사적 고용 규모 면에서는 소극적으로 평가하면 불가리아, 아르메니아의 1993년 수준과 유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면 체코, 폴란드, 러시아 등 상당수 체제전환 국가의 1993년 수준과 유사하며, 중간적 평가라면 헝가리, 루마니아의 1993년 수준에 해당된다.

따라서 크게 보아 북한의 시장화 수준은 구소련·동구의 체제전환 초기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체제 전환을 막 시작한 단계가 아니라 체제전환에 착수해서 1~2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소규모 사유화, 가격자유화, 기업구조조정 등 세 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보다도 사적 고용 하나만 놓고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사실 개별 지표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북한의 시장화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진전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울러 북한의 시장화 추세는 체제전환의 일반적인 패턴과도 다소 상이한 모습이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진전도가 비슷하지만 기업구조 조정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물론 북한이 본격적인 체제전환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결국 법·제도가 아니라 현실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개혁기의 모습과 체제전환 초기의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른바 북한식 경제 개혁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접수: 11월 13일 / ■ 채택: 11월 24일

참고문헌

- 남성욱·문성민, “북한의 시장경제 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1998년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1호(2000).
-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서울: 한국은행, 2002).
- 성채기 외, 『북한 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 양문수, “경제위기와 개혁·개방의 모색,” 박재규 편,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서울: 법문사, 2004).
- _____,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 연구』, 제12권 제2호(2005).
- _____, “조정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경제개혁,” 『북한조사연구』, 제10권 1호(2006).
- 윤덕룡·이형근, “북한의 물가 인상 및 배급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2002).
-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각호.
- 통일부·통일연구원, 『북한경제 개혁동향』(2005).
- 홍익표·동용승·이정철,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 체계 변화 및 향후개혁 과제 - 중국과의 비교연구』(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니카가네 카즈히 지, 이일영·양문수 역, 『중국경제발전론』(서울: 나남출판, 2001).
- 加藤弘之, 『中國の經濟發展と市場化 - 改革・開放時代の檢證』(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1997).
- 黃磷, “中國の流通と商業,” 佐佐木信彰編, 『現代中國經濟の分析』(東京: 世界思想社, 1997).
- 山口重克編, 『市場經濟: 歷史, 思想, 現在(增補版)』(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1997).
- 北京師範大學經濟與資源管理研究所, 『2003 中國市場經濟發展報告』(北京: 中國對外經濟貿易出版社, 2003).

EBRD, *Transition Report*, various issues.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A Study on the Level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Yang, Moon-Soo(Univ. of North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take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level of marketization in the North Korean economy. Due to the difficulty of procuring official North Korean statistics on marketization, the author has compiled data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s of North Korean refugees.

Regarding methodology, the study utilizes the analytic framework of the Transition Reports issued by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EBRD).

This framework, widely used by EBRD economists in evaluating the process of transition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is extremely valuable both in terms of theory and practicality.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extent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by examining three of the various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degree to which transition has progressed: small-scale privatization, price liberalization, and enterprise restructuring.

Viewed from a wider perspective, the results show that North Korea's level of marketization is roughly on par with that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in the early period of their transition. Furthermore, depending on the specific case, this comparison is applicable not to the initial stage of their transition, but rather to a period one or two years into the process. In fact, the results of analyzing each individual indicator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has progressed to a degree much further than we have imagined.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trends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differ somewhat from the general pattern of transition. For example, the degree of small-scale privatization and price liberalization is similar to that in other socialist countries, but the restructuring of enterprises in North Korea has advanced relatively rapidly. Of course, this phenomenon may be due to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yet to commence any fundamental transition. On a macro level, North Korea simultaneously exhibits features that characterized other socialist countries during periods of economic reform and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ir transition.

As a cavea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tentative, and the author acknowledges the limitations imposed by the small sample size of the survey and by the reliance on surveys of refugees for data.

Key Words: North Korea, level of marketization, transition, small-scale privatization, price liberalization, enterprise restructuring

필자 약력(계재순)

양문수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1985)하고, 일본 도쿄대(東京大) 대학원에서 “北朝鮮の經濟開發: 經濟低迷メカニズムの形成と展開”로 경제학 박사학위(2000)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는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2001), “북한의 시장화 초기 거시경제 운용방향”(2003),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제도경제학적 접근”(2006) 등이 있다.